

3부 성찰과 미래

사 회

정운영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주제 6: 한국의 민주주의운동, 87년 이전과 이후

-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

- 발제: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주제 7: 한국 민주화운동과 운동문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

- 발제: 박승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교육기획부장)

주제 8: 민주화운동과 기념: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 발제: 정근식(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김진호(당대비평 편집주간)

-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 김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한국의 민주주의운동, 87년 이전과 이후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1. 머리말: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운동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파시즘적 개발독재체제가 존재하였던 61년부터 87년까지의 운동을 통칭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을 정점으로 한 투쟁을 통하여, 바로 그 파시즘적 독재체제의 '퇴진'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바로 자신의 투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독재를 대립물로 하는 '반독재' 운동으로부터, 실현된 민주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운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87년 이전에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파시즘적 개발독재체제를 전제로 그 체제에 의해 억압된 민주주의의 '회복(回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면, 87년 이후의 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쟁취한 형식적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것을 확장·심화·급진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정점이자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나¹⁾는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변화된 운동을 포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운동(혹은 민주주의투쟁)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87년 이전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여 싸웠던 운동, 즉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협의의 민주주의운동이라고 한다면, 87년 이후는 회복된 형식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심화·급진화하는 광의의 민주주의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양자를 포괄하여 민주주의운동(투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²⁾

우리가 통상 '민주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개념에는 '민주주의를 실현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일거에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1) '펼쳐'라는 말 대신에 순수 우리말을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조희연, 2002, "한국민주주의투쟁의 보편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국제심포지움(한국민주화운동의 국제적 위상), 2002.10.17,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시민적·민중적 투쟁을 통하여 실질화·확장·심화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87년 이후에도 민주'화'의 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파시즘적 독재라는 상황 하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내포적 의미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포괄하여 민주주의운동 혹은 민주주의투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⁴⁾

이 글은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목표로 하였던 민주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분화·변화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복합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러한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87년 이후 민주화되어가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분화된 영역의 운동—특히 제도정치, 시민운동, 민중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그들간에 상호작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심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작동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87년 이전의 한국민주주의운동—민주화운동의 성격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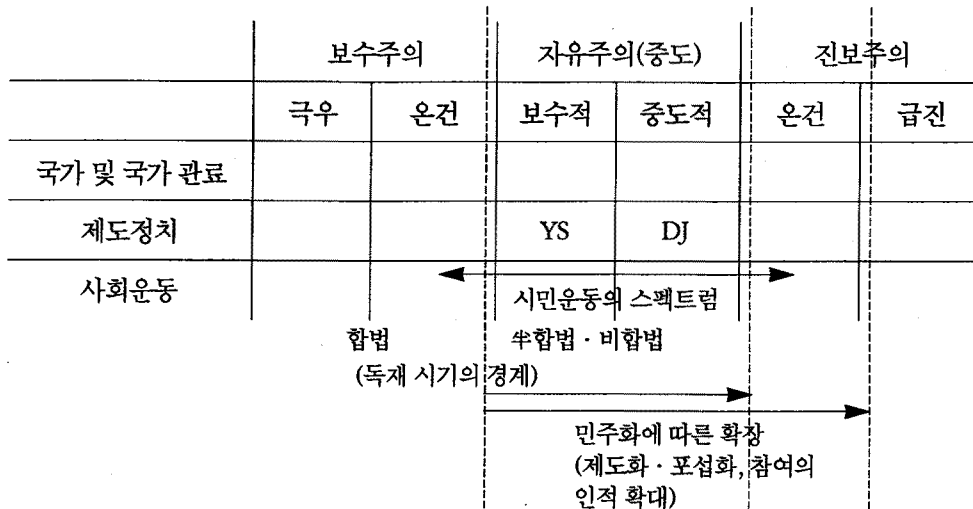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61년부터 87년까지의 시기는 파시즘적 개발독재시기 혹은 권위주의시기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개발독재체제에 대해선 선도적인 저항을 주도하고 그것을 대중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다.

3) 국가의 비(非)민주주의화는 여러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국가유형, 국가형태, 레짐 및 정책 등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그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운동도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조현연,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참조.

4) 물론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주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에서는 그러한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보다 확장된 의미의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되는—라는 점에서 그 내포적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권리도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쟁취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형식이나 제도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확장된 민주주의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층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희연 편, 2001,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양한 함의를 갖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유지·심화시키기 위한 투쟁들이 다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이 한국에서 국민적 의의를 갖는 것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정된—그 단적인 예는 대통령 등 대표자의 선출과정 자체가 강압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예외적' 인 독재상황에서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개념 자체는 87년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87년 이후에는 광의의 민주주의운동으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운동의 한 특수형태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단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세력구성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수준과 3가지 정치적 지향으로 나누고자 한다.⁵⁾

그림1) 국가, 제도정치, 사회운동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이념분포의 축과 그 변화



이런 구분을 전제로 할 때, 50년대의 극우반공주의체제 하에서는 극우보수주의적인 정치적·사회적 세력만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는 어용화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지적 지향으로서의 자유주의일 뿐이지 현실 속에서는 극우보수주의에 헤게모니적으로 포섭되어 존재하게 됨), 진보주의는 공적 공간으로부터 배제되어 비합법적인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체제 하에서는, ‘어용적’ 자유주의가 50년대와 같이 여전히 극우반공주의에 포섭된 상태로 존재하나, 이제 자유주의의 일정 분과가 저항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70년대 교회 및 반독재 지식인들, YS나 DJ로 상징되는 제도정치세력들의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70년대 말-80년대 초반의 시기에, 자유주의세력은 배제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 및 반독재 사회운동의 온건파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는 한편에서 어용적 자유주의와 반

5) 이러한 구분과 이에 기초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 민주주의 · 정치변동』, 당대, 5장 5절(80,90년대 정치변동의 국가론적 성격); 조희연,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담론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총론』,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독재민주화운동에-자의건 타의건-합류한 저항적 자유주의로 분화되게 되는데, 전자는 도덕성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후자가 '진정한' 자유주의로서의 국민적 정당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진보주의는 맑스주의, 레닌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급진적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더욱 급진화·혁명화하게 되며, 현실적 존재양태의 측면에서는 5공화국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서 전투적인 성격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 시기 진보주의세력은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중심화되어가게 되고 나아가 반미주의적 지향을 강화해가게 된다. 진보주의적 반독재세력 내부에는 맑스주의자와 비(非)맑스주의적 급진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주체사상 신봉자, 레닌주의자, 모택동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적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⁶⁾ 이러한 진보주의의 반(反)자본주의적·반미주의적 급진화는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연대세력이 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 혁명적 민주주의담론은 자유주의세력에게도 일정한 급진성과 진보성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이 반독재투쟁에 있어 전투적 진보주의세력의 전투적 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민주주의담론의 국민화속에서 그 급진화가 관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달리 국민적 운동으로 대중성이 강화되어 가는데, 이와 함께 투쟁양식의 면에서는 전투성이, 이념적 지향의 면에서는 급진성이 강화된다.

이런 점에서 70·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저항적 자유주의(정치세력 및 사회세력)와 새롭게 출현한-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독재체제에 전투적으로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주도 하에서 저항적 자유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것이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런 민주화운동의 복합적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한편에서 보면 '제도정치' 세력과 '사회운동' 세력의 연합운동이었으며, 이념적 지향이라는 점에서는 '자유주의적' (정치적·사회적) 세력과 '진보주의적'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적 세력과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투화와 급진화의 결정적 계기는 물론 신군부에 의한 80년 광주학살사건이었다.(조희연, 2001,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중항쟁사』 참조)

〈표 1〉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복합적 성격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	활동영역	'제도정치' 세력+ '사회운동' 세력
	이념적 지향	'자유주의적' (정치적·사회적) 세력+ '진보주의적' (정치적·사회적) 세력
	민주주의의 내용	'자유민주주의' 적 세력+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

3.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이중성

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정점을 상징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바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과 급진적·전투적 진보주의세력이 연합하고 여기에 국민적 투쟁이 결합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적·전투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선도 속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것을 분기점으로 하여 파시즘적 개발독재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며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마련되게 된다. 앞서 서술한 대로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정점이면서 이를 계기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새로운 조건에 놓여지게 되며 분화·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6월 민주항쟁은 항쟁의 '최소주의적 요구' 를 수용해서 항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던 군부정권의 전략적 행위, 즉 6·29선언에 의해서 종결된다. 나아가 이후 12월 대선을 통해서 민주항쟁에서 연합했던 제 정치사회 분파들이 분열하면서(YS 및 DJ의 분열, 민중진영의 분열 등) 최종적으로는 군부권위주의정권이 '합헌적' 재집권으로 나아가게 된다. 민주항쟁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급진화된 요소가 존재하였지만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직선제와 같은 '최소주의' 적 투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6.29 선언은 바로 이러한 최소주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민주항쟁 연합을 균열시키고 민주항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적 대응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6.29 선언에 의해 일차 민주항쟁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를 민주항쟁의 '1차 종결'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후 민주항쟁에서 연합하였던 제도정치세력은 급진적 운동세력과 분리되면서 개헌 및 선거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테이블로 들어서게 된다. 이후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양 김씨를 상징으로 하는 제도정치세력들은 분열되게 되고 급진적 운동세력들도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 민중후보 등으로 분열되면서, 결국 군부권위주의세력이 '합헌적' 재집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로써 6월 민주항쟁을 정점으로 하는 투쟁은 종결되게 된다. 이를 민주항쟁의 '2차 종결'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나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의 이중성' 을 지적하게 된다. 즉 6월 민주항쟁은 성공

이면서 동시에 실패라고 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정권을 퇴진시키고 직선제에 의한 민선정부를 도래시키고 이후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도정에 한국사회를 올려놓게 된다는 점에서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이후 시민운동을 포함한 각종 사회운동 및 개혁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舊) 군부권위주의정권을 '혁명적' 으로 퇴진시키고 구 권위주의정권의 유산을 철저히 청산하여 이를 통해 민주항쟁의 급진적 요소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 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전에는 민주진보세력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 의 길과 구 세력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의 길이 서로 각축하고 있었다면, 87년을 거치면서-6·29선언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이 지배적인 경로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구 권위주의세력 및 기득권세력이 제도적·비제도적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민주개혁이 이루어지는 경로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6월 민주항쟁은 이중성-특별히 그 결과의 측면에서는-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87년 이전에는 민주진보세력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 의 길과 구 세력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의 길이 각축하고 있었다면, 87년을 거치면서-6·29선언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이 지배적인 경로로 정착되었으며, 그 결과 구 권위주의세력 및 기득권세력이 제도적·비제도적 권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개혁이 이루어지는 경로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87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지향하였던 '민주화' 가 어떤 형태로든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주화의 질적 성격은 다양할 수 있다. 그 민주화의 성격을 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6월 민주항쟁의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면서,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새롭게 분화하면서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연결되게 된다. 여기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서 민주화가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서술하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 및 상호작용의 방식과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에 의해 규정되면서 87년 이전의 복합적

7) 6월 민주항쟁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유팔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2000;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기억과 전망』 1호, 2002).

구성요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면서 자기발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은 바로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4. 반독재민주화운동의 87년 이후의 분화

87년 이전의 운동이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87년 이후의 운동은 복원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심화를 쟁점으로 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각 시기마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었다.⁸⁾ 60년대부터 87년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 사회의 지배블럭은 근대화와 성장이라는 지배담론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운동진영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핵심적인 저항담론으로 설정하고 투쟁해왔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저항담론은 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국민적인 시대정신이 되어갔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퇴진하고 6.29선언을 통해 지배블럭이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을 대세로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저항세력의 요구사항에서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확대되게 된다. 여기서 시대정신은 자연스럽게 '민주개혁'(democratic reform) 혹은 개혁으로 변화하게 된다. 정부와 정당 및 사회운동 모두에게,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구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왜곡성을 극복하는 민주개혁의 과제가 공유된다. 그 결과 87년 이후 모든 정부들은 민주개혁을 추진하거나 추진한다고 표방하게 되었으며, 사회운동은 바로 이러한 민주개혁을 철저화하거나 아래로부터 추동하는 역할을 담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민주개혁이-시대정신이 된-새로운 조건 하에서 87년 이후 다양한 민주주의운동으로 어떻게 자기전개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의 분화는 87년 이전의 여러 구성요소들이 독자화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⁹⁾ 이와같은 민주주의라는 조건 속에서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은 제도정치 영역으로 복귀하여 민주개혁의 추진

8) 조희연, 2003, "87년 이후 민주개혁의 부침과 현단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학술단체협의회 편,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현단계 한국민주주의의 이념, 현황, 전망』, 이후.

9)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생취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반독재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던 것을 일부는 포섭하는 방식으로 지배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지배를 새로운 기초에서 재안정화시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둘째로 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재정립되면서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으로부터 독자화한다. 셋째 진보주의적 운동의 경우는 지난 반독재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했었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내부의 분화를 경험하게 된다.

(1) 제도정치세력의 복귀와 이를 동력으로 하는 제도정치의 민주화

먼저 87년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들의 제도정치로의 복귀이다.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구성세력이었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들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복원되면서 제도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복귀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의 복귀를 포함하는 헌법개정협상에서 신민당은 지난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의 거리의 투쟁 대열에서 민정당과의 협상의 테이블로 이전하게 된다.

제도정치에 복귀한 자유주의적 정치세력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당질서와 정치질서를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여기서 정당질서의 민주화는 선거를 통한 경쟁방식의 민주화, 정당운영의 민주화, 공천과정의 민주화, 반부패의 방향으로의 정치문화의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포괄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상은 이들이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 87년 이후의 시민운동 및 민중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포섭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그에 따른 정당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정당의 재편이 87년 이후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이러한 재편의 과정은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제도정치의 '변형주의'(transformism)¹⁰적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변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면에서 지배적 정당이 저항진영의 개인이나 집단의 일부를 포섭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개발독재 시절의 정치적 경쟁구도는 독재 대 반독재, 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가 새로운 정치적 경쟁구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 집권당은 집권당 나름대로의 부단한 자기변신을 감행해야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변신은 국민적 지지를 '재' 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정강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

10) Gramsci, A.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1, p.58; Jessop, B., The Capitalist State, Oxford: Martin Robertson, 1982, p.150. 변형주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치변동을 설명한 글로서는 최장집(1995)을 참조. "변형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비평』 13호.

하여 새로운 인물의 층원 등이 그 예들이다. 후자의 예로서, 개발독재 시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재야 반독재저항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을 '수혈' 하는 현상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이념형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구도, 즉 '강력한' 보수주의 정당, '취약한' 자유주의정당, '배제된' 진보주의정당의 구도에서, 포스트-권위주의 구도로 변화하게 된다. 87년 이후의 정당질서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보수집권당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단독집권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보수파와의 연합을 통해 집권하기 위한 야당의 자기변신과정이었다. 전자는 과거의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의 '변형주의' 적 재편이고, 후자는 그러한 집권당의 변화에 대응하는 야당의 '변형주의' 적 자기변화 시도이다. 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합리적' 보수정당이고, 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이다. 여기서 변화의 중요한 동력은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부터 제도정치로 복귀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이었다.¹¹⁾ 여기서 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아래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좌절하면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 세력의 연합집권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은 온건그룹(YS 등)은 구 보수주의세력과 포섭되는 방식으로 구 보수주의정당에 합리화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의 진보그룹(DJ 등)은 구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주변파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자유주의적 반독재 제도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민주개혁과정이 전개되게 된다. 이것이 국민정부의 출범이고 참여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먼저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정당의 합리화 과정 역시 자유주의적인 반독재 제도정치세력의 흡수를 통해서 진전된다. 90년 1월 3당합당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는 변형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구 보수주의 정당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온건자유주의정파의 흡수를 통해 집권당을 자기 '혁신' 하는 과정이었다. 자신들이 대적(對敵)하였던 구 야당지도자를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 구 보수주의세력이었던 구 민정당은 문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96년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 출신 재야 인사들을 흡수함으로써 자기정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도 또 다른 예이다.

11) 여기서 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아래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좌절하면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 세력의 연합집권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은 온건그룹(YS 등)은 구 보수주의세력과 포섭되는 방식으로 구 보수주의정당에 합리화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의 진보그룹(DJ 등)은 구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주변파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자유주의적 반독재 제도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민주개혁과정이 전개되게 된다. 이것이 국민정부의 출범이고 참여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 등 도덕성 있는 인물들의 수혈을 통해 기성정당의 변형주의적 재편을 선도한 것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주요한 구성부분이었던 자유주의적인 반독재야당이였다. 신민당 및 민주당은 자신들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동지' 였던 인물들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제도정치의 민주화를 진행하게 된다. 반독재 야당의 자기혁신 및 변화 역시 주로 재야출신 인사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독재정권 시기 야당정치세력과 연대관계에 있었던 인사들 중, 국민적으로 도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야인사의 영입을 통하여, 야당은 보수주의적 집권당의 자기혁신에 대응할 수 있었다. 평민당으로부터 국민회의에 이르는 변화과정은 재야인사의 주기적인 충원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한국당이 96년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 재야인사들을 충원하였다고 한다면, 새정치국민회의 같은 경우가 문민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항하는 재야수혈의 의미에서 국민회의에 충원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주요한 구성부분이었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은 집권세력의 일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또한 집권세력의 헤게모니분과가 되어 개혁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과거의 정치사회의 변형주의적 재편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자유주의적 ·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 중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제도정치로 수혈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재편에 기여하고,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의 제도정치화를 촉진하게 된다.¹²⁾

(2)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시민운동으로의 정립과 진보주의운동으로부터의 독자화¹³⁾

87년 이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현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성격이 시민운동으로 분립(分立),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으로부터 독자화한다고 하는 점이다. 나는 시민운동을 그 이념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활동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민적 · 정치적 권리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에서 그 조건들을 활용하면서 전개되는 운동' 이라고 규정한다,¹⁴⁾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반체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시민적 · 정치적 조건 및 민주주의적 조건의 확보가 전제될 때 성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12) 물론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민주적 '자배' 질서의 계구축에 협력하는 과정이다.

13)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2,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기억과 전망』 1호.

14) 조희연, 2002,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기억과 전망』 1호. 물론 시민운동은 결코 단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시민운동을 단일한 실체로 보는 것 자체가 80년대 후반 보수적 지형 속에서 구성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인식' 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1, "시민적 이슈와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적 관점: 일반민주주의투쟁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서출판 현장에서서미래).

앞서 서술한 민주항쟁의 이중성은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시민운동의 초기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성공의 측면에서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년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공포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존립할 수가 없었다. 수년의 실형을 감수하면서 저항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급진적인 민중운동으로 국한되어 있었다(사실 이것이 민중운동의 도덕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성격의 시민운동은 민주항쟁이 군부권위주의정권을 직접적으로 퇴진시킴으로 형성시킨 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은 그 실패의 측면에서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시민운동은 과거의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민중운동과 자신을 구별하면서—비(非)민중운동 혹은 반(反)민중운동적 정체성—온건한 이념을 표방하고, 합법적·제도적 수단과 통로를 활용하는 운동으로 나아가 계급계층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간층적 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하였다.¹⁵⁾ 이처럼 초기 시민운동의 정체성은 이전의 민중운동에 비해서 보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체성은, 6월 민주항쟁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보수언론을 포함한 구세력들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의 도정으로 한국사회가 이행하게 된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초기 시민운동세력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가 만들어내는 비(非)급진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보수언론은 이러한 초기 시민운동의 비(非)민중운동적, 반(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운동의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기성체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이 급진적·진보적 민중운동과 분립(分立)되고 그로부터 독자화한다는 점이다. 군부권위주의 하에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진보주의 및 급진주의와 결합된 채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출현은 반독재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합되어 있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분립, 더 정확하게는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분립과 독자화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 독재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보주의적이고 전투적인 운동과 결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진보주의적 운동과 구별되는 온건하고 제

15)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앞의 책, 325-330쪽.

도내적인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 자신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립은 86년 6월 민주항쟁의 '실패'라고 하는 결과에 의해 시민운동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¹⁶⁾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정세 속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내재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분리정립되게 된다. 사실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이미 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의 전투적 저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세력은 진보주의적 세력의 해계모니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반독재의 과정에서 어용적 자유주의와 저항적 자유주의가 분화되고 후자가 진보주의와 연합한다는 점은 지적하였다. 어떤 점에서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제도권화하고 자유주의적 사회세력은 시민운동으로 분립하게 되는, 즉 87년 이전 민주주의운동과정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운동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으로 이원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이러한 시민운동은 몇가지 점에서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발전과는 구분되게 된다. 시민운동의 초기정체성이 보수적 정체성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수적 정체성으로 일면화되어 있던 시민운동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초기 시민운동은 비록 그 중요한 인적 구성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운동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87년 이후 민주주의적 조건 속에서, 시민사회의 주체화와 민주적 활성화가 증대된 데에 크게 의존한다. 87년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전환 이후, 과거 권위주의체제

16)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선형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외연과 그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민중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 현재 시민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별운동 형태들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여왔다. 우리가 현재 시민운동이라고 범주화하는 단체들(예컨대 YMCA, 홍사단 등)은 이전 시기부터 있었다. 그러나 87년 이전에는 '탈(脫)정치화된 시민사회단체'로 존재하였다. 그런 점에서 87년 이후에 경실련 등으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은 새롭게 '구성'된 사회운동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그러나 그것이 87년 이후의 지형 속에서 독특한 성격의 운동으로 부상되었고 어떤 점에서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갖는 시민운동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시민운동인가, 시민운동에 포괄되는 운동은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은 선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구성주의적 사회운동론(임희섭, 2001,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 출판부, 9장)과 같은 특정한 사회운동론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민족주의와 같은 담론의 구성에서 보여지는 보다 일반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칭한다. (베네딕트 앤더슨, 윤흥숙 옮김,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이런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시민운동은 80년대의 전투적·급진적 지향의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제도적 조건을 활용하면서 자유주의적 지향을 갖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구성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는 80년대 후반 초기시민운동의 초동주체들의 이념적 지향과 전략적 선택이 매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87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공과 실패의 이중적 결과 속에 규정되면서 스스로를 비(非)민중운동적 '신' 사회운동으로 '구성'하면서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에서 순응과 굴종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이 개인의 차원에서 주체화(empowerment)될 뿐만 아니라 직업집단 및 계급계층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는 등 집단적으로 주체화되어갔다. 87년 이전에 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는 방향에서 시민사회가 '저항' 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87년 이후에는 스스로를 주체화시키는 방향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80년대 초반-90년대 초반에서와 같이 시민운동이 비(非)민중운동적인 보수적·자유주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시민운동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였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진보적 시민운동', '민중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들, 초기의 보수적 정체성을 갖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출현, 초기의 보수적 정체성의 이완 등은 시민운동의 재구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의 정체성의 재구성은 민중운동으로의 시민운동의 정체성 복귀나 시민운동적 정체성의 해소보다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립구조를 지속시키면서, 시민운동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3)민주개혁의 철저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민주주의투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진보주의적 구성을 대표하는 민중운동은 87년 이후 복원된 형식적 민주주의조건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조직적 발전을 지향하게 된다. 자율적인 시민사회 공간의 확장은 합법적인 운동공간이 확장됨으로써 과거 비합법적이거나 반(半)합법적인 운동들이 합법적인 단체로 전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과거의 권위주의체제의 변화가 제공하는 정치적·사회적 공간 속에서 이전의 전투적인 저항운동이 다양한 지역적, 전문적 사회영역으로 확장되게 되며, 군부권위주의정권의 극단적인 탄압 속에서 그 대중적, 조직적 확장을 제약당하고 있었던 노동운동 등 대중운동의 발전이 나타나게 된다. 87년 이후의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운동의 조직적 발전은 노동자운동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개된 7·8·9월 노동자대투쟁에 의해 예비되고 있었다. 노동자대투쟁은 87년 노동자운동이 선진노동자투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자기발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후 노동자운동은 지역별 민주노동조합운동, 업종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90년 1월 전노협의 건설 및 95년 11월 민주노총의 건설 등으로 발전해가게 된다.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교사운동, 빈민운동 등 다양한 민중적 운동들이 정치적·조직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혹은 그 이

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전문직 영역에서 민주적 지향을 갖는 활동조직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을 추동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속한 전문직 영역 내부에서의 민주적 개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는 민주화 혹은 민주개혁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화와 급진화를 추동하기 위한 민중운동의 다양한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별히 민중운동의 전선조직들은 국민적인 이슈로 제기되는 민주개혁 이슈들을 추동하는데 기여하였다. 89년 1월 21일 출범한 전국민족민주연합, 1991년 12월 6일 출범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등은 자주, 민주, 통일 투쟁, 민중생존권 투쟁 등을 통해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근의 전선조직으로서는 2001년 3월 14일 출범한 전국민중연대를 들 수 있는데, 4대투쟁영역으로 신자유주의반대투쟁,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민주주의 쟁취투쟁, 민족자주권 쟁취투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위로부터의 불철저한 민주개혁의 한계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복하려는 투쟁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조직적 발전과정은 민중운동 내적 구성의 변화과정이기도 하였다. 단적으로 87년 이전에는 인텔리계 요소나 비조직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직운동적 요소와 대중운동적 요소가 강화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선운동 혹은 연합운동 내부에서도 이전에는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 등의 지위가 강력하던 상태에서, 노동운동과 같은 기층민중운동의 지위가 강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민중운동에서는 노동운동은 민중운동 내에서의 중심성과 주도성 측면에서 강력하지 못했다. 즉 87년 6월 항쟁만 하더라도 다양한 민중적 운동의 연합운동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됨에 따라, 민중운동 내에서 노동운동의 중심성과 주도성이 더욱 강력하게 된다. 이것은 민중정치 내에서 '노동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17) 89년 1월 성립한 전민련과 90년 성립한 국민연합의 이중적인 전선조직의 존재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87년 이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그동안 과시즘적 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노동자운동이 대중적인 노조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학생운동의 경우는 이미 반독재정치투쟁 과정에서 학생대중운동으로 발전되어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운동조직들이 1991년 국민연합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로써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상층' 전선조직과, 87년 이후의 변화발전하는 대중운동의 조건을 반영하는 '하층' 전선조직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후 두 조직은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으로 통합되지만, 전국연합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다시

이러한 민중운동은 87년 이후--불완전한--민주주의적 조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질화·심화·급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획득된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리 점에서 87년 이후의 민중투쟁은 87년 불완전하게 획득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며 그것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다층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나아가 민중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충분히 의제화되지 못했던 사항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확장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노동운동이 투쟁하는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6월 민주항쟁에서 명확한 형태로 의제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확장적·진보적 해석에서는 내포될 수 있는 의제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리 점에서 87년 이후 민중운동은 6월 민주항쟁에서 명확히 정식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확장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중운동이 87년 이후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87년 이후의 제한된 민주주의공간에서 자신들의 계급계층적·정치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였다. 루시마이어가 지적한대로, 부르주아 혁명과정에서 부르주아가 자신의 이해실현을 위해 투쟁한 것이 시민혁명의 동력이었는데, 이들은 부르주아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한 이후 부르주아체제의 확장이 아니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게 되고 오히려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상태에서 확장하게 된다.¹⁸⁾ 그런 점에서 '부르주아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무어¹⁹⁾의 명제와 '노동자계급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테르본이나 루시마이어의 명제를 빌린다면,²⁰⁾ "87년 이후 시민운동적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는 확장되어 왔지만, 민중운동적 실천이 없었다면 현재의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운동이 제도정치와 민주개혁의 지형 자체를 공유하는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진보주의적 요소를 계승하는 민중운동은 민주개혁의 지형 자체를 확장하고 민주개혁 자체를 급진화·심화시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2001년 3월 전국민중연대가 성립되고 여기에 전국연합이 일 구성부분으로 재위치지워지는 것도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분화재편 속에서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같은 운동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총체적인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민중운동이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그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8) Rueschemeyer, D, E. h. Stephens, E. H and J. D. Stephens, J. D., 1998, 『자본주의발전과 민주주의』, 나남.

19) Moore, Barrington, Jr., 1969,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Harmondsworth: Penguin (originally published in 1966); 진덕규 옮김, 1990,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한길사.

20) Therbon, Goran, 1978, What Does the Ruling Class Do When It Rules? London: NLB; Therbon, Goran, 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London: NLB; Rueschemeyer, D, E. h. Stephens, E. H and J. D. Stephens, J. D., 앞의 책.

경로에 따라—이전의 권위주의세력들이 일정한 이니쉬어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민주개혁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민주적 개혁의 제한적 시행을 지향하는 구 세력과 민주적 개혁의 철저화를 지향하는 민주세력 사이의 투쟁은 강화되게 된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후자의 입장에 서서 민주적 개혁의 실질화와 심화를 지향하며 싸우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나, 민주개혁의 수준이나 내용에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은 합법적이고 제도내적인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다면, 민중운동은 그러한 합법성과 제도내적 영역 자체의 확장을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된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3가지 과정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87년 이후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상이한 방향에서 그 동력이 분화되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같이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제도정치에의 재복귀와 진보적 사회운동 인물들의 제도정치권 포섭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한국제도정치의 민주적 합리화의 동력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민중운동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맥락에서 그것을 변형된 형태로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분화되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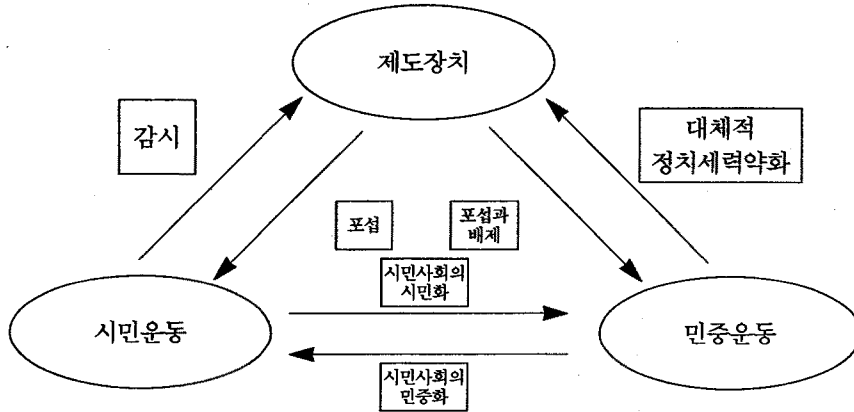
5. 87년 이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된 요소들 간의 각축과정

—제도정치, 시민운동, 민중운동

앞 절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3가지 구성요들로 분화되면서 자기발전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 절에서는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각축과정에서 민주주의운동의 다양한 형태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3가지 분화형태들간의 상호작용을 그 핵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87년 이후의 형식적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운동, 민중운동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몇가지 측면만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2)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1) 제도정치와 시민운동—감시(monitoring)와 포섭의 긴장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통합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관계는 87년 이후 국면에서는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로 전화되게 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치질서와 정당질서의 민주적 개혁이 당면 현안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으로 분립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추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분화된 상황 속에서, 시민운동과 제도정치의 관계는 '감시(monitoring)와 포섭의 긴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자신이 갖는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제도정치에 대한 감시자적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87년 이후 진행되는 민주적 개혁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의 속도는 다른데, 정치적 개혁이 지체되어 시민사회와 제도정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이를 '정치지체'라고 개념화한다. 이러한 정치지체의 원인은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²¹⁾ 먼저 정치적 전환과 혁신을 지체시키는 구조적 요인들로서는, 첫째 한국의 민주화가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을 따라 전개되게 되고 그 결과 구 권위주의세력의 방어적 역량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는데, 이는 구 권위주의세력들이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에서 일정한 이니셔티브를

21)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로는 조희연, 2000,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여름호.

가짐으로써 구체제의 민주개혁이 불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는 기존의 국가기구 내에서 구 세력이 갖는 힘과 그들의 저항 때문에 언제나 '과소개혁'으로 정도되게 되고 그 결과 정치지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고착화된 지역주의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구 정치에 이해관계를 갖는 보수주의적 정치세력들의 분화를 저지하고 지역주의를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고, 저항세력들 역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분화가 저지되면서 정치의 고착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구 개발독재체제를 재생산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반공주의이데올로기가 존속되고 그 결과 한편으로는 구 극우보수주의적 권위주의세력들이 자기재생산을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세력, 특히 진보적 정치세력의 진출이 저지되게 됨으로써 기존 제도정치의 전환과 혁신이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분단반공주의질서의 변형적 존속은 구 권위주의세력들의 정치적 자원동원능력을 제고시키고 저항세력들의 분화, 진보적 정치세력의 진출저지 등을 결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87년 이후의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의 상호관계는 제도정치의 지체현상이 만성화되고 그에 따라 시민운동이 제도정치의 개혁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고 나아가 제도정치가 수행해야 할 대의기능을 일정하게 대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나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 (proxy representation)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가 저발전되어 있고 개발독재국가에 의해 왜곡된 조건 하에서는 제도정치의 대의기능이 왜곡(歪曲)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기능의 비합리성, 비대의성(非代議性)도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으로 '종합적 시민운동조직' 혹은 '권력감시행' 시민운동체의 역할에서 발견할 수 있다. 8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조직의 다양한 발전 및 그들이 실제 동원력에 비해 커다란 발언권, 즉 '과잉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제도정치의 대의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대의의 대행' 현상의 표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자체로 보면, 자신들의 실제적 동원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넘는 대표성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잉대표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정치지체현상에서 유래한다.²²⁾

22) 나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의의 대행' 현상은 단순히 한국정치가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근대적'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한국정치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한국정치가 '근대적인' 개방형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정치지체는 한국정치가 '근대적인' 한국정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대적 정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를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틀 내로 한정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성을 대의정치와 정당정치의 틀 내로 '대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특별히 2차대전

이러한 감시역할과 '대의의 대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외적 감시운동에서부터 낙천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다.

〈표 2〉 시민운동 및 NGO들에 의한 감시 및 정치개혁운동의 형태들

외적 감시운동	입법 감시운동 (입법 반대운동 및 대안 입법활동 등)	각종 정보공개 및 분석활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낙천낙선운동		
소환운동		
대체정치세력화운동		

그동안 전개되어온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을 향한 감시운동을 본다면, 시민·사회운동에 의한 정치개혁운동은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처음 시민사회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일상국면에서는 의정감시운동과 선거국면에서는 공명선거감시운동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YMCA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감시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의회 감시운동(의정지기단 등) 및 조례제정운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92년 선거에서는 경실련을 주축으로 시민단체협의회가 '공명선거감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94년 9월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의정감시센터를 두어 보다 상설적인 의정감시를 시도하였으며,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감시운동,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의정감시운동이 확대되어갔다. 이러한 의정감시운동과 같은 외부적인 감시운동과는 별개로, 9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목으로, 일부 시민운동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의 일부 개혁정치그룹과 연합하여 집단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의 서구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제도화된 정치로만 포괄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정치화를 담고 있었다. 이른바 신사회운동으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의 정치화는 이미 근대적인 제도정치의 틀을 뛰어넘는 비제도정치적 '정치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는 제도정치를 포함하는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의 '탈국가화'라는 변화가 정치지체의 이면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에 의한 정치독점이 깨어짐으로써, 정치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정치의 '제도정치적' 한계성을 넘어 시민사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정치의 지체와 그로 인한 정치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감시운동은 1999년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였는데,²³⁾ 이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감시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운동이었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한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000년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정치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낙천낙선운동은 바로 이러한 국정감시운동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시민사회진영에서의 이러한 의정감시형태의 정치개혁운동의 정점에 2000년 1월 12일 출범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서 있다고 보여진다.²⁴⁾

낙천낙선운동은 기존의 정치개혁 압박운동, 외부에서의 제도정치의 감시운동을 뛰어넘어, 보다 민주적인 공천과 부패무능정치인의 퇴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정치개혁압박운동이었다. 981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한시적 연합체인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부패무능한 정치인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공천반대운동, 공천된 부패무능인사들에 대한 공천철회운동, 선거국면에서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국면에서는 낙천낙선운동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치개혁시민연대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즉 비리·무능 정치인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개혁적 투표를 유도하고자 했던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기성정당들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기능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의 일부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의의 대행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일부에서는 부패·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소환운동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법제화를 위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서라도 정치적 비판을 위한 '상징적' 소환운동은 가능하고 계획되기도 하였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외적 감시를 넘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입법운동—대체입법운동이나 특정 입법화에 반대하는 운동 등—도 정치개혁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국가기구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및 분석활동 등도 NGO의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자적 역할과 대행자적 역할에 대응하여 제도정치, 특히 복귀한 자유주의적 제도

23) 1999년 9월 8일, 40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를 발족하고 국감시민모니터 활동에 돌입하였다.

24) 조희연, 2001,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운동과 낙천낙선운동", 유팔무·김정훈 편, 200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제도정치는 부단한 포섭을 통하여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시민운동가들은 87년 이후 정부와 정당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입함으로써 포섭에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시기에 청와대, 내각, 민자당 등에 중요한 수혈의 대상이 되었으며, 96년 선거에서는 '꼬마 민주당' 과 연합하여 정치개혁시민연합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의 진출은 시민운동의 '중립성' 테제가 명애가 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정치개혁감시운동으로서의 역할은 참여정부 이후 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지하다시피 낙천낙선운동에서 연합전선을 구성하였던 시민운동은 이제, 낙선운동을 최대치로 하는 중립적 감시운동의 입장을 견지하는 그룹, 당선운동을 지향하는 그룹, 적극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그룹으로 분화되고 있다.²⁵⁾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된 형태로서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시민운동)의 상호관계는 후자에 의한 전자의 감시와 전자에 의한 후자의 포섭이 상호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제도정치의 민주개혁이 추동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자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념적 지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 비판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2) 제도정치와 민중운동—배제·선택적 포섭과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긴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민중운동은 제도정치에 의해 주도되는 민주개혁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철저화·급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반공규율사회'²⁶⁾ 적 조건 때문에,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가 극대화되고 그 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진출이 제한되게 된다. 이것은 한국정당정치의 이념적 폐쇄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 국가 하에서 제도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여 '갈등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기능보다는 '배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왔다. 즉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군부권위주의국가의 정치적 정당화기제로서, 억압적 국가기구의 일부로 기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갈등을 반영하고 대의(代議)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심대한 괴리'가 존재하게 된다.

25) 이에 대해서는 정대화, 2003,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치개혁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준비모임, 2003.6.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강당 참조.

26)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2장 1절(분단과 '반공규율사회')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 간의 산업화를 통하여 노동자계급이 다수의 계급이 된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이미 산업사회의 갈등이 기본적인 갈등이 되는 사회로 이행하였다.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지향을 갖는 세력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정치는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이 대단히 제한되고 폐쇄화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정치의 왜곡성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일정하게 완화되어 갔으나 여전히 진보적인 사회적 세력의 진입을 제약하는 형태로 극우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적으로 왜곡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폐쇄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이 괴리의 공간에서 일정하게 '대의의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역할은 괴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달성하지 못한다.

여기서-기본적으로 제도정치와 이념적 지형을 공유하는 시민운동과 달리-민중운동의 경우에는 대체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민중운동은 진보주의적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진보주의적 '정치세력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게 된다. 이른바 진보정치세력화라고 표현되는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87년 이전까지의 시기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온건정치세력과 급진민중운동세력의 연합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한다면, 87년 이후는 친(親)제도정치적 민중운동세력이 운동 내부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컨대 비판적 지지론) 그로부터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87년 12월 대선에서의 독자후보 혹은 민중후보, 88년 4월 총선에서의 민중의 당, 92년 총선에서의 민중당, 92년 대선에서의 민중후보, 97년 대선에서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운동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진보정치세력화의 시도들의 연장선 상에 2000년 4월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이후 사회당)의 실험이 나타났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중 광역의회 선거에서 8.1%의 정당지지를 획득한 민주노동당의 경우²⁷⁾제도정치세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 청년진보당과 같은 경우 제도정당의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제도정당을 대체하는 대안진보정당운동이라기보다는 선거국면을 이용한 급진적 정치운동의 제도정치공간에의 확장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민중운동 내부에서는 최근까지도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27) 민주노동당은 전국득표율에서는 1.18%이지만, 출마지역구에서는 13.09%의 예상밖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울산북구와 창원을 선거구에서는 당선권에 육박하는 선전을 하였다.

‘대리반영론’ (비판적 지지론 등)²⁸⁾이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87년 이후 초기 민주화 단계에서는 비판적 지지 혹은 대리 반영론의 입장이 강력하게 내부에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대리반영론의 입장에 섰던 인물들이 제도정당에 선택적으로 포섭되게 되고 대리반영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민중운동의 다수흐름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수렴되었다고 보여진다. 97년 국민승리 21이나 이후 민주노동당의 경우에 민주노총과 같은 민중운동의 사회운동적 중심조직들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에 대응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일부였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배제적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리반영론에서 있는 인사들을 제도정치로 포섭하여 스스로를 재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응전하였다고 생각된다. 사실 반공주의적 구조에 의해 진보정치세력화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현실 자체는 용인하면서도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운동의 상징적 인물들, 특히 자유주의적 지향에 포괄될 수 있는 인물들을 수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87년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와 민중운동의 관계는 후자에 대한 구조적인 배제조건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후자의 온건분파를 포섭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후자의 급진분파는 전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3)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연대와 경쟁의 긴장

시민운동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 내재화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87년 이후 독자화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중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진보주의적 구성부분이 계승발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중운동은 기본적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급진적 계승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시민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온건한 계승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구성부분은 87년 이전 독재의 조건 하에서는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연대와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시적 표현을 빌린다면, 87년 이후 민주화

28) 대리반영론은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이 반공주의로 조성된 열악한 정치적 조건 때문에 제도정치의 장에서 독자적인 ‘대의’ 세력을 형성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연대하고 그를 통해서 진보주의적 요구의 대리반영을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황태연 교수는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그 이념적 지평을 사회적·진보적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노선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화합의 이념과 전략”, 『정치비평』 제2호, 1998)

과정 속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적 공간 속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도 시기별로 일정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여진다. 먼저 80년대 후반에는 시민운동이 비(非)민중운동 혹은 반(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양자간에 긴장과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이슈들이 마치 국민적 이슈이고, 계급적 이슈들은 '집단지주의' 적인 이슈인 것처럼 인식하고자 하는 왜곡된 보수적 인식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에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대립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러한 정체성은 약화되고 진보적 시민운동 등 다양화된 정체성을 갖는 시민운동이 분화·확대되면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중첩 및 공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민중운동진영에 의한 일반민주주의 투쟁 영역의 재발견 및 진보적 개입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또한 시민운동 진영 내부에서 진보적 시민운동 등 시민운동의 다원적 분화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90년대에는 시민운동진영과 민중운동 진영 간의 사회개혁 투쟁(사회보험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둘러싼 다양한 연대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하여 왔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는 시민운동이 보수언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우호적 반응을 받음으로써 민중운동이 공론의 장으로부터 주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도 긴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개혁 투쟁 및 일반민주주의적 투쟁에 있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하는 민중운동과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때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운동 간에 긴장이 존재하였다.

또한 4.13 총선을 둘러싸고 민중운동이 진보정당에 의한 제도정치화를 목표로 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시민운동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90년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운동이 벌리는 외부로부터의 정치개혁 압박운동에 대하여-비록 그것이 체제 내적인 운동이기는 하지만-민중운동 진영에서는 동참 내지는 협조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4.13 총선 국면을 둘러싸고는 민중운동 진영이 진보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제도정치 진입운동을 하게 되고 시민운동 진영은 낙천낙선운동이라고 하는 기성 제도정당 합리화 촉구운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일정한 긴장이 존재하였다.²⁹⁾

보다 각론적으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긴장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7년 이후

29) 이와 관련하여 낙천낙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대립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나는, 낙천낙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정치개혁운동의 양 날개라고 생각하며, 대립적이기보다는 상보적인 운동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표명과 개혁촉구를 요구하는 '국민적 전선'이 유지되는 것은 진보정당에게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논지였다. 문제의 관건은 낙천낙선운동으로 조성된 기성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새로운 정치세력, 특히 진보정당

민주개혁을 통하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적 '정상화'³⁰⁾가 촉진된다고 표현할 때, 이러한 정상화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분화와 긴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국가를 유지재생산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항하여 국가의 민주개혁 혹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중운동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재생산에 함께 반대하면서도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 대 국가의 민주화의 대립구도 속에서, 후자를 지향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달리 표현한다면,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이념지형을 표현하면서-기본적으로 반체제적 지향이 아니면서-체제 자체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활동들을 전개하는 반면에, 민중운동은 체제합리화적 차원을 넘어 체제혁신적 혹은 체제변혁적 입장에서 자기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민운동은 정부와 정당의 '자유' 민주주의적 합리화를 촉진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면, 민중운동은 자유민주주의적 합리화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급진화의 동력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양자 간에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개혁이라는 점은 공유하면서도 그러한 국가의 자유주의적 정상화를 추동하느냐 국가의 진보화를 지향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긴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국가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많은 점에서 공유점이 있지만, 경제적 자유화와 세계화의 쟁점을 둘러싸고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나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은 한편에서 정치적 자유화의 성격과 경제적 자유화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³¹⁾ 민주화는 한편에서 권위주의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자본과 시장의 자율성도 증대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자를 정치적 자유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경제적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의 과정은 권위주의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한편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제고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의 지배력과 시장의 영향력도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더구나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러한 후자의 경향을 강화시키게 된다.

에 대한 적극적 지지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조희연("낙선운동-진보당운동은 정치개혁운동 양날개", 『진보정치』 2호, 2000. 3.31), 장석준("조희연 교수의 '낙선운동 양날개론' 을 비판한다", 『진보정치』 3호, 2000. 4.7), 조준상("장석준 부장의 '낙선운동 양날개론 비판' 에 대한 반론", 『진보정치』 4호, 2000. 4.21) 참조.

30) 조희연, 2003, "국가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급진화", 『시민과 세계』 4호, 2003.

31) 조희연, 2002, "정치적 자유화의 '축복' 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의 정치경제개혁정책의 구조적 성격", 『시민과 세계』 2002년 2호, 당대.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은 정치적 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구 권위주의체제의 민주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추동자적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자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과거의 관치주의적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경우 시민운동은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며 최소한 적극적인 반(反)민영화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반면에 민중운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관철이자 자본지배력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비판하게 된다.³²⁾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극명하게 그 긴장의 지점이 드러난다.³³⁾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경제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둘러싸고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논쟁적 비판이 있었다. 먼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 특히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 자유기업원과 자유시민연대에 의한 비판이 있었다.³⁴⁾ 이들은 경제민주화운동이 반(反)기업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지향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 및 시장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으며, 자유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참여연대 앞에서 매주 목요일 반대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장이 '사회주의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둘째는 급진적 혹은 좌파적 비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김성구 교수 같은 경우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서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경제개혁운동은 친기업적이고 재벌 등 대자본의 합리화에 기여할 뿐 그것의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가한 바 있다.³⁶⁾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광범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하는 신자유주의

32) 한국전력의 발전소 분할매각 같은 경우 전혀 다른 차원의 쟁점을 보여준다. 한전은 환경주의적 입장에서 분할매각을 찬성하였고 노동운동은 이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반영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33) 이에 대해서는 조희연·홍일표 외, 2003, 『정부·기업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참조.

34)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은 2001년 5월 2일 자유기업원 회원들에게 보내는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여연대의 관계자들이 시민운동을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해석하면서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참여연대의 좌파적 성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2001년 8월 11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2년 6월 19일 서울 지방법원). 자유기업원 실장 박종창의 글도 소액주주운동의 이념성을 문제삼는 글의 예이다. 박종창(자유기업원 NGO실장), "참여연대의 이념성 공개비판; 참여연대는 정치적 권력기구로 변질되어 체제변혁을 지향하고 있다", 『월간 조선』 2001년 5월호.

35) 물론 이러한 비판은 사실 경제민주화운동의 객관적인 성격을 밝혀주기 보다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일부가 왕왕 드러내는 극우적 프리즘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왜곡되게 과잉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논쟁으로서의 성격은 띄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36)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둘러싼 급진적 비판과 반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성구, 1999, "과대포장된 소액주주운

비판 등은 주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소액주주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비판이다. 노동운동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비판적 정서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최근 대안연대회의에서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운동이 투명성과 같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비판적으로 대기업 개혁의 기준으로 강제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에 대한 한국경제의 지배에 기여한다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별히 이 논쟁은 SK글로벌에 대해서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1천 5백억원을 들여 SK(주) 지분 14.99%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 경영권 논란이 일었던 상황을 둘러싸고, 대안연대회의가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장하성 교수가 민족적 좌파가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³⁷⁾ 이에 대해 대안연대회의가 반박함으로써 확산된 바 있다. 대안연대회의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국민경제에 대한 국민국가적 조절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극대화시키고 그 결과로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한국대기업의 지배가능성을 열어주는 식으로 운동하여서는 않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³⁸⁾

이 쟁점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 특히 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보수주의세력들은 그것의 ‘급진성’과 개혁성에 대하여 비판하는 반면에, 진보주의적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그것의 ‘체제합리화’적 성격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다(둘째와 셋째의 비판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시좌가 다르다. 둘째는 급진적 좌파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셋째는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87년 이후 민주주의운동 과정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된 발전형태 간에 긴장과 대립지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첫번째 우파적 비판에 대해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 모두가 비판하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두번째와 세번째 쟁점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 사회운동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 간에, 진보주의적 운동 내부에서 차원에 따라 상이한 대립지

동’, 〈한겨레21〉 255호, 4.29; 김성국, 1999, “진보적 경제민주화운동으로 가야”, 〈한겨레21〉 258호, 5.20; 김주용, 1999, “소액주주운동 과대포장에 대한 반론”, 〈한겨레21〉 257호, 5.13.

37) 〈월간 참여사회〉 2003년 5월호.

38) 참여연대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철저한 민주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증권집단소송제나 출제총액제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의 의해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대안연대회의에서는 그러한 개혁방안이 초국적 자본의 국내 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거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연대회의의 일부에서는 재벌 자체의 정당한 자기개혁과 재벌지배구조의 인정이라고 하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점이 생겨날 수 있음을 가르켜 주고 있다³⁹⁾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제도정치,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상호관계

관계	관계의 성격
제도정치와 시민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제도정치의 감시역할 확대. 제도정치의 '정치지체'로 인한 시민운동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 반대로 제도정치에 의한 시민운동의 의제 및 인물의 포섭을 통한 제도정치의 정당화 노력이 진행됨. 양자는 지형을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적 비판의 관계가 존재.
제도정치와 민중운동	민중운동은 제도정치에 의한 민주개혁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철저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제도정치의 한계성을 비판하면서 '대체적인 정치세력화'를 추구함.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자유주의적 제도세력은 민중운동에 대한 배제기조를 용인하면서 민중운동의 온건그룹을 포섭하는 방식을 통하여 제도정치의 정당화를 시도함.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에는 연대와 경쟁관계가 존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이 그것을 촉진하는 지향을 갖는데 반하여, 민중운동은 그러한 정상화를 뛰어넘는 국가의 급진적 개혁을 추구함. 경제적 자유화와 세계화를 둘러싸고 있는 시민운동이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그것의 긍정성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반면에, 민중운동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관철이라는 점에서 대결적 입장을 가짐. 일반민주주의투쟁과정에서의 헤게모니 경쟁이 존재.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통상 시민운동이 활동하는 이슈영역은 '일반민주주의투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민중운동의 적극적인 개입의 부재에 의해서-그동안 일반민주주의투쟁영역이 시민운동에 의해 '독점화'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⁴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87

39) 대안연대회의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운동에 대해서 제기하는 쟁점 중 과도한 재벌개혁운동이 재벌의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은, 사실 제3세계 민주화에 대한 타협적 온건론을 주장하는 입장이 제기하는 쟁점을 연상케 한다. 제3세계 민주화전략에 대한 타협적 온건론을 주장하는 오도넬이나 웨보르스키(임혁백·윤성학 옮김, 『민주주의와 시장』, 한울아카데미, 1999)의 경우, 반독재투쟁이 군부의 반동화를 초래하여 민주화를 후퇴시키지 않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하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쟁점이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민주화의 역전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나 하는 데 대해서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40) 일반민주주의투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1, "시민적 이슈와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적 관점: 일반민주주의투쟁과 노동운동".

년 6월 항쟁은 군부독재의 퇴진을 통해서 일반민주주의적 투쟁공간을 확장하였고 민주적 개혁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민중적 투쟁을 통해서 확보된 일반민주주의적 투쟁공간은 민중적 투쟁에 의해 채워지지 못하였고, 시민적 투쟁의 확대를 통해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민주주의투쟁이 시민운동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역설적으로 일반민주주의투쟁을 민중운동이 '방기' 하고 그것이 시민운동에 의해 독점화되는 상황에서는 충돌지점이 적기 때문에-양자간에 '외재적인' 비판관계는 성립할 수 있어도-내재적인 체계모니터투쟁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민주주의투쟁에 대한 민중운동의 적극적인 개입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긴장지점은 확대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제도적 공간이 확장되게 되면 시민운동의 제도권화가 촉진되는데,⁴¹⁾ 이럴 경우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과 양자간의 긴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민운동의 진보화가 촉진된다고 하면, 이들 간의 관계는 연대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6. 요약과 맺음말: 반독재민주화운동 정신의 급진적 계승을 위하여

이상의 분석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파시즘적 독재체제에 의해 배제된-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 자유주의적 사회운동,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구성을 갖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새로운 분화·변화의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87년 이전의 운동이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87년 이후의 운동은 구체제의 민주개혁과-복원된-민주주의의 실질화와 심화를 쟁점으로 하는 운동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 속에서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다음과 같이 분화하게 된다. 1)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은 제도정치 영역으로 복귀하여 민주개혁의 추진체로 변화하게 되고, 2)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재정립되면서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으로부터 독자화하며, 3)진보주의적 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했는데 이러한 정체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내부에 분화를 경험하게 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들(YS와 DJ등)이 제도정치에 복귀하여 제도정치영역의 '변형주의' 적 합리화에 기여하게 되

41) 정종권, 2001,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유팔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은 전자가 민주개혁의 추동역할을 하게 되고 후자는 제도정치세력에 의한 민주개혁의 불철저성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질화·심화·급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다음으로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둘러싼 각축과정에서 민주주의운동의 다양한 형태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인데,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관계는 87년 이후 국면에서는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의 관계로 전화되게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과 제도정치의 관계는 '감시와 포섭의 긴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자신이 갖는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제도정치에 대한 감시자적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제도정치의 개혁이 지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정치지체' 상황 때문에 시민운동이 적극적인 준정당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의의 대행'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에 대하여 제도정치는 상징적인 인물들의 포섭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된다. 두 번째 제도정치와 민중운동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운동의 감시자적 역할과는 달리 후자는 제도정치에 대항하는 '대체적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게 된다. 87년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와 민중운동의 관계는 후자에 대한 구조적인 배제조건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후자의 온건분파를 포섭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후자의 급진분파는 전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민중운동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급진적 계승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시민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온건한 계승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구성부분은 87년 이전 독재의 조건 하에서는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연대와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시적 표현을 빌린다면,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시민사회적 공간 속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나는 87년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복합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는 반독재민주화운동 자체가 복합적 지향을 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적 맥락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합적 지향 속에서 어떤 지향을 계승·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제도권화하면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진보주의적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속에서야 비로써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현재적 정신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급진민주주의정신이 현단계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의 동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0년대의 다양한 전투적·급진적 투쟁 속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우리가 그 불철저성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단순히 직선제의 회복이나 민주세력의 집권으로 환원할 수 없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흐름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추동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회고담이나 후일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정신으로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나는 87년 이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진보주의적 지향이 현단계 한국민주주의의 급진화의 동력으로 자기실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적 요구사항들은 체제내로 포섭되거나 제도화되어갈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화의 증진이 어떤 점에서는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여성운동의 성과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이제 소수자인권에서 적극적인 주류화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성부의 수장은 진보적 여성운동 출신이 맡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 운동의 과제는 단순한 제도화를 넘어서서, 탈제도화적 급진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제와 시민사회적 비판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의 정상화를 뛰어넘는 급진민주주의의 식을 갖는 세력과 집단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재편에 대응하는 응전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사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소속해 있던 인사들이나 집단들이 제도정당의 합리화를 위한 인적 수혈의 주된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제도정치가 탈(脫)권위주의적 민주정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동력을 급진적 민주주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정당이나 자유주의적 정당에 의해 ‘대의’ 될 수 없는 시민사회의 급진적 요구와 소수자집단의 요구를 대의할 수 있는 진보정치세력화—노동 및 환경 등—의 노력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 제도정치 진입의 문턱에 있는 진보정당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급진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정신은 사회운동의 변화된 조건 하에서 다층적인 사회적 진보를 강제하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80년대 후반 이후의 시민운동의 분립된 발전과 민중운동의 정치적·조직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운동이 전진해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하게 존재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다양한 이슈영역으로 확장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화되지 않은 이슈영역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민운동의 출현 과정에서 가졌던 비(非)민중운동적 정체성은 시민운동의 진보화를 가로막는 의식적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여전히 '체제내적 운동'으로 인식되어 시민운동의 급진적 전망들은 주변화되고 있으며 노동운동과의 적극적 연대는 부차화되고 있다. 나는 더 많은 이슈영역들, 과거에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많은 이슈들이 급진적 행동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안티조선, 학벌철폐 등 기존의 쟁점화되지 못하였던 생활세계의 이슈들이 급진적으로 쟁점화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급진적 쟁점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생활세계의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급진적 민주주의의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로 존재하지 않고 그 사회경제문화적 내용이 급진적으로 확장되는 데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두가지 분화형태인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적극적인 연대 및 동맹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세계사적 동맹모델⁴²⁾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과제가 철저하게 실현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 그 자체에서부터 연유한다. 더구나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과 한국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투적 민중운동(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정당한 연대가 증진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시민운동이 단순히 주어진 틀 내에서의 운동으로 안주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자본주의의 천민성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개혁하고자 했던 유산들이 직간접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체제내화되고 관료화되면서, 비(非)노동계급적 비판성과 역동성의 측면에서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이 독자적으로 출현하여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서구와 달리,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화된 시민운동 간의 적극적인 연대의 모델이 개발되고 실현될 필요를 제기한다. 현실지형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지 않고 시민운동이 전개될 때 그것은 체제의 합리화 운동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한국사회의 철저한 민주개혁의 과제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제3세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세계사적 동맹 모델을 한국에서부터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5장(『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진보적 시민운동론).